



[산업] 9월 자동차 내수 회복세 뚜렷 08



Economy

코스피	2358.00 (+30.11)	코스닥	858.39 (+10.24)
금리 (미국 3년)	0.881 (+0.035)	환율 (원/달러)	1163.40 (-6.10) (5일)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의 변화 추이>

구분	2005년 8월~	2013년 7월~	2016년 4월~	2018년 4월~	2020년 4월~	2021년 4월~
유가증권	지분율 3%/시총 100억원 이상	지분율 2%/시총 50억원 이상	지분율 1%/시총 25억원 이상	지분율 1%/시총 15억원 이상	지분율 1%/시총 10억원 이상	지분율 1%/시총 3억원 이상
코스닥	지분율 5%/시총 50억원 이상	지분율 4%/시총 40억원 이상	지분율 4%/시총 20억원 이상	지분율 2%/시총 15억원 이상	지분율 2%/시총 10억원 이상	지분율 2%/시총 3억원 이상
코넥스		지분율 4%/시총 10억원 이상	지분율 4%/시총 10억원 이상	지분율 4%/시총 10억원 이상	지분율 4%/시총 10억원 이상	지분율 4%/시총 3억원 이상

/국회예산정책처(2017)

‘3억 대주주 연좌제’ 개미들 반발에 두손

여권, 대주주 양도세 재검토 시사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넘어서 이르면 내달 정부 보완책 나올듯 가족합산범위 등 일부 손질 유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를 놓고 개인투자자(개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권에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주주 기준을 가족합산 3억원보다 높이거나, 대주주 규정 시 가족합산 과세 범위를 수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르면 11월께 정부의 보완책이 나올 것이라 전망이다.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한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주주명부가 폐쇄되는 연말까지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로 분류돼 해당 주식 매도 시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문제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당사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지분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경영지배 관계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도 해당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5일 대주주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대해 “정부 기초에 어긋남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최고위원의 발언인 만큼 정부가 내년부터 대폭 낮아지는 대주주 요건 기준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학개미운동으로 국내 개인투자자가 사들인 주식이 9조원에 달한다”며 “대주주 요건 완화로 10조원 이상의 개인 순매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3억원이라는 기준의 출처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대주주 요건 범위를 가족 단위로 묶는 것이 국제 기준에 온당한지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주식을 살 때마다 가족 간에 어떤 주식을 열

거나 보유했는지 묻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여당 지도부에서 잇달아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다.

여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2021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은 지난 정부 때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요건의 완화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여당에서 재검토 방침을 시사한 만큼 기준 입장을 마냥 고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법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치면 되기 때문에 국회 심의단계를 밟지 않고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주주 자격이 되는 투자액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대주주 요건 강화가 2년짜리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23년 전면 양도세 부과를 앞두고 현행 10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유지하되, 대주주 규정 시 가족합산과세 범위 등 일부 규정을 재검토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기재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보완책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전망이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백신 관리 부실... 3년간 4.5만명분 폐기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보관 불량 “관리 개선해 폐기량 최소화해야”

최근 3년 동안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었던 백신중 4만5000명분 이상이 보관 불량으로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냉장 보관 불량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백신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에 대한 품질 검사 결과를 6일 발표할 예정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 폐기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 동안 보건소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위해 구매한 백신중 4만5295도즈(4만5295명분)가 폐기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전체 구입물량의 0.34%인 8766도즈, 2018년

에는 1.09%인 1만5957도즈, 지난해에는 전체 1.11%인 2만572도즈가 각각 폐기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폐기된 백신의 총금액은 2017년 1억 290만원, 2018년 2억418만원, 2019년 3억1822만원 등에 달한다. 주요 폐기 사유는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냉장고 고장·정전에 따른 보관 불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최근 독감 백신 유통 과정의 문제로 인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백신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구매한 백신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용 백신의 품질 검사 결과를 6일 발표하기로 했다. 국가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중단된 지 2주 만이다.

식약처는 유통조사 결과를 토대로 9개 지역에서 운송조건을 가장 크게 벗어난 제품 1350도즈를 질병청으로부터 의뢰받아 품질 검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3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문제가 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2259명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달 21일 무료 접종 물량을 공급하던 ‘신성약품’이 백신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상온 노출을 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무료 접종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하루 뒤인 지난 달 22일 질병관리청은 문제 백신의 접종자가 한명도 없다고 밝혔지만 백신 접종자는 지난 달 25일 이후 105명으로 집계된 이후 연일 늘면서 일주일만에 20배로 급증했다. 상온 노출이 의심돼 사용이 중단된 백신 물량은 총 578만명분이다.

질병청은 품질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접종 재개 방안과 일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전국 주택 종합 전세가격 0.53% 상승

올라 전월(0.44%) 대비 상승률이 커졌다. 서초구(0.63%), 송파구(0.59%), 강남구(0.56%), 노원구(0.49%) 등 서울의 대표 학군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 폭이 크고, 강동구(0.54%), 동대문구(0.49%)나 마포구(0.44%), 강서구(0.37%), 구로구(0.37%) 등도 중저가 전셋집 위주로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단지의 모습.

한국감정원이 5일 발표한 ‘2020년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달 14일 기준 전국 월간 주택종합(공동주택·다세대연립·단독) 전세가격은 0.53% 올랐다. 서울의 대표 학군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 폭이 크고, 강동구(0.54%), 동대문구(0.49%)나 마포구(0.44%), 강서구(0.37%), 구로구(0.37%) 등도 중저가 전셋집 위주로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단지의 모습.

/뉴시스

구글코리아 대표 불출석... 알맹이 빠진 국감 예고

위커 대표 대신 존리 사장 참석할듯 수수료30% 논란 모르쇠 답변 우려

구글이 인앱결제제를 강제하고, 모든 앱·콘텐츠에 수수료를 30%로 확대하기로 한 정책이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핵심 증인과 참고인이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질적 논의 없는 ‘알맹이’ 빠진 국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이번에도 ‘모르쇠’ 식 답변할까... 구글 코리아 대표 국감 불출석

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최근 국회 과방위에 낸시 메이블 위커 대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 입국하면 자가격리 등 방역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참고인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망사료’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으로 채택됐던 정진수 엔씨소프트 부사장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과방위가 애초 위커 대표를 과방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최근 구글이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지불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꾼 것을 두고 질의하기 위해서다. 구글은 인앱결제 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30% 수수료 부과를 웹툰, 음악 등 전체 콘텐츠 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위커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구글코리아에서는 한국내에서 광고영업과 마케팅 등 업무를 총괄하는 존리 사장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실상 존리 사장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 이번 국감도 알맹이 빠진 국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존리 사장은 매년 국감 때마다 ‘모르쇠’ 식의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3면에 계속>

/김나인 기자 silkni@